

“강경화 외교 적임” vs “1급 공무원도 어려워”

인사청문회 여야 공방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동시에 진행된 이른바 ‘슈퍼 수요일’인 7일 여야는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5대 인사 원칙을 중심으로 공직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면서 낙마 공세를 벌이자 여당은 ‘결정적 하자’는 없다며 엄호에 나섰다.

이날 정치권 안팎에서 최대 관심을 받은 강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다문화가족 작성 의혹, 자녀의 이중 국적 의혹 등에 대해 돌아가면서 따져 물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미국에서는 탈세가 드러난 공직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한 사례가 없다”(윤영석 의원), “이 정도면 1급 고위공무원도 어렵다”(최경환 의원), “인사배제 원칙 가운데 최소 3개 이상 위반으로 임명권자에게 부담 주지 마라”(서정원 의원)면서 강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외교부의 순혈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적임자”(박병석 의원), “강 후보자 발탁은 전문가 자질과 능력을 인정할 것”(원혜영 의원)이라며 적극 옹호했다.

강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증여세 납부 부 문제는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부동산 투기를 비롯한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김이수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통합진보당 판결과 헌법재판소 소장 임기 문제가 야당의 집중 타깃이 됐다.

자유한국당 광상도 의원은 “후보자가 내린 판결 19건이 민주당에 편향됐다”며 민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 자리에 오른



해명 7일 국회에서 열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왼쪽부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각 후보들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소장 - 김이수

5·18, 통진당 판결 타깃 與 “일생 약자 보호 힘 써” 野 “판결 19건 민주당 편향”

김 후보자가 헌재에서 보는 판결을 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와 함께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임기와 5·18 민주화운동 판결, 배우자의 해외 동반 출장, 농지취득 위반 의혹 등을 문제 삼았다.

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소수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며 약자 보호에 힘써왔다는 점을 부각하는 등 엄호에 주력했다.

김 후보자는 5·18 판결에 대해서는 “제

경제부총리 - 김동연

병역 시력검사 조작 의혹 여야 업무 능력 긍정 평가 金 “아파트투기 용납 안할 것”

판결로 지금까지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지만 통진당 해산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 해석 범위 내에서 쓴 것”이라는 소신을 밝혔다.

김동연 후보자 청문회는 정책 검증이 중심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과거 정부에서 무상복지 등에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는 점과 병역 시력검사 조작 의혹, 판교 아파트 투기 의혹 등을 제기했다. 하지만

외교부장관 - 강경화

위장전입·세금탈루 등 공세 與 “순혈주의 타파 적임자” 野 “인사원칙 3개이상 위반”

김 후보자의 업무 능력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답변을 통해 “부동산 투기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며 “내주려는 현장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적극적 거시정책과 함께 가계부채, 부동산, 구조조정, 보호무역주의 등 대내외 리스크의 산체 관리를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韓-日 경색 국면 풀릴까

정세균 의장 2박3일 일본 방문...아베 총리와 회동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경색한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외회외교’ 채널을 가동하기 위해 7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2박3일 일정의 일본 방문에서 정 의장은 아베 신조(安倍 晋三) 총리와 중의원·참의원 의장단 등을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정 의장은 8일 아베 총리와 만나 한일 양국의 공조방안을 논의한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일외교 기조에 대한 지지를 당부할 방침이다.

아울러 같은 날 오사마 타다모리(大島 理森) 중의원 의장과 다테 추이치(伊

達 忠) 참의원 의장 등 일본 의회지도자들과 만나 동북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주변국 의원들 간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할 예정이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공조 방안에 일한일 ‘6자회담 당사국 의회 간 대화’에 일본 측의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6자 의회 대화’는 지난해 7월 제헌절 경축사에서 정 의장이 제안한 회체로, 중단된 6자회담을 재개하는 ‘마중물’ 역할을 당사국 의회가 하자는 취지다. 또한, 동북아 협력, 저출산·고령화, 환경·문화교류 등을 토론했는 ‘한일 의회 미래대화’의 정례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주선 ‘先협의를-後결정’ 협치 촉구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최근 정부·여당의 일방통행식 국정 이 계속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다당제하에서 선(先) 협의, 후(後) 결정의 협치 방식을 정부·여당에 건의 하겠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 추경 편성, 여야 공통공약 추진, 장관 인선 등을 예로 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중차대하지 않지만 야당에 설명이나 사전협의가 없었다. 민주당도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강력히 비판해놓고 왜 과거 적폐 세력과 똑같이 국정을 수행하는지 이해 하지 못하겠다”며 “44개 공통공약의 선 정 과정과 목록조차 공개 안 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5대 인사 원칙을 벗어난 후보자에 대해서도 반성과 사과 없이 무조건 통과만 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말로만 협치를 외치고 야당을 거수기로 대하는 일방통행식 불통과 오만 이 계속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협치는 지속하기 어렵고 국회는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인사청문회와 관련, “원칙대로 임하겠다. 흠결 있는 후보에 대해 여론몰이로 압박하며 야당의 비판에 대해 정쟁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더 높은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책무가 있다. 국민의당은 변화를 바라는 국민 열망을 받아들여 엄중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개호·주승용·송기석 ‘헌정대상’

의정평가 상위 25%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장성·함평·영광)과 국민의당 주승용(여수)·송기석(광주 서구갑) 의원이 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0대 국회 1차년도 국회 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2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법률소비자연맹은 매년 6월 초에 1년 단위로 전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12개의 평가기준에 의거, 종합평가를 통해 상위 25%인 75명의 우수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광주·전남 유일한 민주당 소속인 이 의원은 지역 예산확보 및 현안 해결은 물론 성실한 의정 활동을 병행, 이 같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대표법안 발의 31건으로 평가 대상 국회의원 중 1표 차지하는 등 법안 활동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송기석 의원은 초선임에도 대표법안 및 공동발의, 국정감사 성적 등 다수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여 “민생 살릴 골든타임” 추경 통과 호소...한국당 “요건 안돼”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7일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통과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백해련 대변인은 이날 한안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이번 일자리 추경은 서민 가계를 안정시키고 민생을 살리는데 모든 초점을 맞췄다”며 “추경은 타이밍이다. 정략적 판단으로 민생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추경이 늦춰지기 않게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또 “청년층 체감 실업률이 23.6%로 1999년 6월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전체실업률 또한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가계부채는 136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IMF 사태 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대량실업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으로, 정부의 이번 추경은 반드시 집행돼야 한다”며 추경안 처리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백 대변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총 62조4000억원 규모의 5차례 추경이 진행된 것을 야당이 더욱 잘 알 것이다. 당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대책’, ‘민생안정-경제회복’을 이유로 각각 17조원 이상의 ‘슈퍼 추경’

을 추진했었고, 민주당은 ‘민생을 살린다’는 대의 하에 동의해줬다”며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꺼져가는 민생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한 조속한 검토와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날 전북도당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민생안정 양극화 완화 경제 성장이라는 우리 경제의 3대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안이 국민에게는 일자리의 숨통을 틔우고 정치권엔 협치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때

우 심각하다.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고, 현재 청년실업률이 올해 4월 11.2%라고 하는 최악수준이며, 전체 실업률을 4.2%로 17년 만에 최악의 상태”라며 “여야가 협치 대신 대립으로 추경의 적기를 놓치면, 추경의 효과가 반감되고 경제는 헤어나기 힘든 수렁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안은 어느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유한회사 J&Y 대부는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NPL관련업무를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 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상가, 공장, 토지, 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NPL채권 매입하여 투자 수익에 참여하실 분

- ▶ 총 매입금액 : 11억원
- ▶ 1인 2,000만원 이상
- ▶ 투자금 회수기간 : 6~8개월
- ▶ 근저당설정 조건

- 채권 물건지는 투자하시는 분에 한하여 공개합니다.

NPL 채권 매입 전문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자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

등록번호 2017금감원-0790

유한회사 J&Y 대부 ☎ 062)382-4987

사업자등록번호 635-86-00606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4954